

태국의 정정 불안과 향후 전망

이재호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Tel: 3460-1134)



차 례 ● ● ●

1. 태국 정치 현황과 배경 분석
2. 최근 주요 경제 현황
3. 향후 정국 전망

주요 내용 ● ● ●

- ▶ 최근 태국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면법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대가 주요 중앙 및 지방 정부청사를 점거하면서 정정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 2006년 탁신 전 총리 사임 이후 태국 정계에는 친·반 탁신 세력 간 정치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잉락 현 총리는 이번 사면법 추진으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함.
- ▶ 최근 수년간 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홍수 등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반정부 시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임.
 - 2013년 태국경제는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태국중앙은행 전망치인 3.7%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증자·환율 등에 이러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음.
 - 소비, 투자 등 각종 경기 관련 지수에서도 내수 둔화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관광산업 등에서도 정정 불안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
- ▶ 향후 태국 정치상황은 1)신속한 정권퇴진 및 조기 총선 실시, 2)장기 대치로 정국불안 심화, 3)제3 세력 개입으로 인한 정리 중의 하나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와 반정부 시위대 모두 상대방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어 단시일 내에 대치 상황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 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정정 불안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우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해 거래처 상황, 노무관리, 외환리스크 등과 같은 부문에 대해 점검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태국 정부부처와의 협의, 승인 등 업무 관계가 중요한 업종의 경우 태국 정부의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신속히 대응해야 함.
 - 현재 태국으로의 투자 진출 및 신규거래를 진행 혹은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정 불안으로 인한 리스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1. 태국 정치 현황과 배경 분석

가. 최근 태국의 정치 현황

■ 최근 태국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면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 시위대가 주요 정부청사를 점거하면서 정정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

- 이번 시위는 태국 여권의 사면법 추진에 반대하는 야권과 반정부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2013년 10월 태국 여권의 사면법 입안을 계기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됨.
- 사면법은 탁신(Thaksin Shinawatra) 전 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사범을 일제히 사면한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탁신 전 총리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11월 11일 상원에서 부결되었으나 정권 퇴진에 대한 야권 및 반정부 단체의 시위는 오히려 더 확산됨.
-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수텝(Suthep Thaugsuban) 전 부총리는 11월 24일 소위 '100만인 꺾기'를 호소하며 정부청사 점거 시위를 지시했으며, 반정부 시위대가 주요 정부청사를 점거함.

■ 태국 잉락(Yingluck Shinawatra) 총리는 반정부 시위대의 정권 퇴진 요구를 거절하고 국민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발동함.

- 야권의 정권 퇴진 요구에 대해서 잉락 총리는 현 정부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정권이며 정권 퇴진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힘.
- 또한 잉락 총리는 11월 25일 국민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내보안법을 발령하고, 경찰의 질서 유지 활동에 따라줄 것을 촉구함.
- 태국 정부는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수텝 전 부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즉각 체포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수텝 측은 정부청사 점거 시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 일부에서는 군부 쿠데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태국 여권과 반정부 시위대가 근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

- 태국 군부 측은 정치적인 중립을 선언했으나, 국가 안정 및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잉락 총리와 수텝 전 부총리 측은 대화를 통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 퇴진 요구에 대한 입장차이가 분명해 단시일 내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태국의 주요 정치 사건 및 이슈(2006~13년 12월 현재)

- 2006. 2 탁신 총리의 Shin Corporation 지분매각 관련 탈세혐의로 퇴진 시위 확대
 탁신 총리, 의회 해산 후 조기 총선 실시 발표(2006. 4 총선 야당 보이콧)
- 2006. 9 군부 쿠데타 발생, 탁신 총리 사임
- 2006. 10 수라웃 총리 임명, 과도내각 수립
- 2007. 3 탁신 정권 부패 조사 및 헌법개정 지연에 따른 PAD(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의 반군부 시위 확대
- 2007. 5 태국 현재 TRT 해체 판결
 탁신 전 총리 및 TRT(Thai Rak Thai)당 출신 의원 110여 명 5년간 정치활동 금지
- 2007. 6 태국 과도정권 정치활동 전면 허용
- 2007. 12 총선 실시 친탁신계 PPP(People's Power Party) 정권 재창출, 사막 총리 취임
- 2008. 9 공직자 겸직금지 규정 위반 사막 총리 사임, 솜차이 총리 취임
- 2008. 12 2007년 총선 불법선거 혐의로 여당 PPP 해산, 민주당 아피싯 36대 총리 취임
- 2009. 4 친탁신 단체 UDD(United Front for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반정부 시
 위로 동아시아정상회담 취소, 국가비상사태 발령
- 2010. 5 친탁신 단체 UDD 방콕 도심 대규모 시위, 군 병력 투입으로 대규모 유혈사태 발생
- 2011. 7 조기 총선 실시, 프어타이당 승리, 잉락 총리 취임
- 2011. 10 태국 중부지역 대홍수 발생
- 2013. 1 일일 최저임금 300바트 공약 실시
- 2013. 10 사면법 입안으로 반정부 시위 심화, 반정부 시위대의 총리 및 내각 퇴진 요구
- 2013. 11 반정부 시위대 정부청사 점거 시위 확대, 국가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발령,
 잉락 총리 불신임안 부결
- 2013. 12 친정부 · 반정부 시위대 충돌로 유혈사태 발생

나. 태국의 정정 불안 배경

■ 태국은 2006년 탁신 전 총리의 사임 이후 친(親)탁신 · 반(反)탁신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가 반복되고 정권이 교체되는 등 극심한 사회분열이 지속되어 옴.

- 탁신 전 총리는 태국의 IMF 구제금융체제의 조기졸업을 이끌어낸 CEO형 리더로, 서민·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2005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탈세, 부정선거 등의 혐의로 대규모 정권 퇴진 시위가 발생했으며,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로 총리직에서 사임함.
- 군부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2007년 총선에서 친탁신계 정당 PPP(People's Power Party)가 승리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고 사막(Samak Sundaravej) 총리가 집권했으나, 공직자 겸직금지 규정 관련 유죄 판결로 사막 총리가 사임함.
- 사막 전 총리 사임 직후 솜차이(Somchai Wongsawat) PPP 부총재가 총리직에 선출되어 친탁신계 정권 유지에 성공했으나, 반탁신 단체인 PAD(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가 정부청사, 의사당, 국제공항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를 전개함.
- 2008년 말 태국 헌법재판소는 2007년 총선 과정에서 여당의 불법선거 의혹에 유죄 판결을 내려 결국 친탁신계 여당인 PPP가 해체되고 정권이 교체됨.

■ 2008년 말 친탁신계 정당인 PPP 해체 직후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친탁신 단체들의 반정부 시위로 정정 불안이 한층 더 심화되었으며, 2010년 군 병력을 통한 시위 진압으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함.

- 2008년 말 민주당 중심의 연정으로 신정부가 출범했으나 친탁신 단체인 UDD(United Front for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정권 퇴진 시위를 전개함.
- 2009년 4월에는 태국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담 회의장에 반정부 시위대가 난입해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함.
- 2010년 5월에는 태국 정부가 방콕 도심에서 친탁신 단체 UDD의 대규모 시위를 군 병력으로 진압해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해 아피싯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함.
- 이에 아피싯 전 총리는 2011년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 재신임을 받고자 했으나 정권 재창출에 실패함.

■ 2011년 조기 총선에서 친탁신계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이 승리해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이 총리에 당선되었으나, 최근 사면법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정치적인 위기에 봉착함.

-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총리는 정치 경력은 전무하나 2011년 총선 과정에서 다수의 인기영합주의적인 공약과 탁신 전 총리의 후광으로 서민·농민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정권 창출에 성공함.
- o 잉락 총리의 인기영합주의 공약은 일일 최저임금 300바트 전국 시행, 쌀 구매가격 50% 인상, 초등학교 1인 1 태블릿 PC 지급 등이며,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서민·농민층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냄.
- 2011년 잉락 현 총리의 취임 직후에는 전임 총리들과 달리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태국에

50여 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위기상황에 직면함.

- 잉락 총리의 인기영합주의적인 공약과 대규모 인프라 건설안 추진에 대해서 재정 부실화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2013년 10월 사면법이 입안되면서 본격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됨.

2. 최근 주요 경제 현황

가. 주요 거시경제지표 악화

- 최근 수년간 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대홍수 등의 악재로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2013년에는 수출은 물론 내수경기도 부진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임.
- 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대홍수로 인해 산업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해 경제성장률이 0.1%까지 하락한 바 있음.
- 2012년에는 전년도 기저효과와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성장률이 6.5%까지 상승했으나, 2013년에는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
- 최근 태국 중앙은행은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2%에서 3.7%로 하향 조정했으나, 최근 반정부 시위로 인해 실제 성장률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됨.¹⁾

표 1. 최근 태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08~12년 3/4분기)

지표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Q	2Q	3Q
경제성장률	%	2.5	-2.3	7.8	0.1	6.5	5.4	2.9	2.7
CPI 상승률	%	5.5	-0.9	3.3	3.8	3.0	3.1	2.3	1.7
수출	십억 달러	175.2	150.8	191.6	219.1	225.9	72.1	69.0	72.6
수입	십억 달러	157.9	118.2	161.9	202.1	219.9	70.3	70.1	66.3
경상수지/GDP	%	0.8	8.3	3.8	1.2	0.5	1.2	-6.7	-0.9
외환보유고	십억 달러	111.0	138.4	172.1	175.1	181.6	177.8	170.8	172.3
외채	십억 달러	76.1	75.3	100.6	104.3	130.7	139.1	141.0	-
환율	Bt/USD	33.4	34.3	31.7	30.5	31.1	29.8	29.9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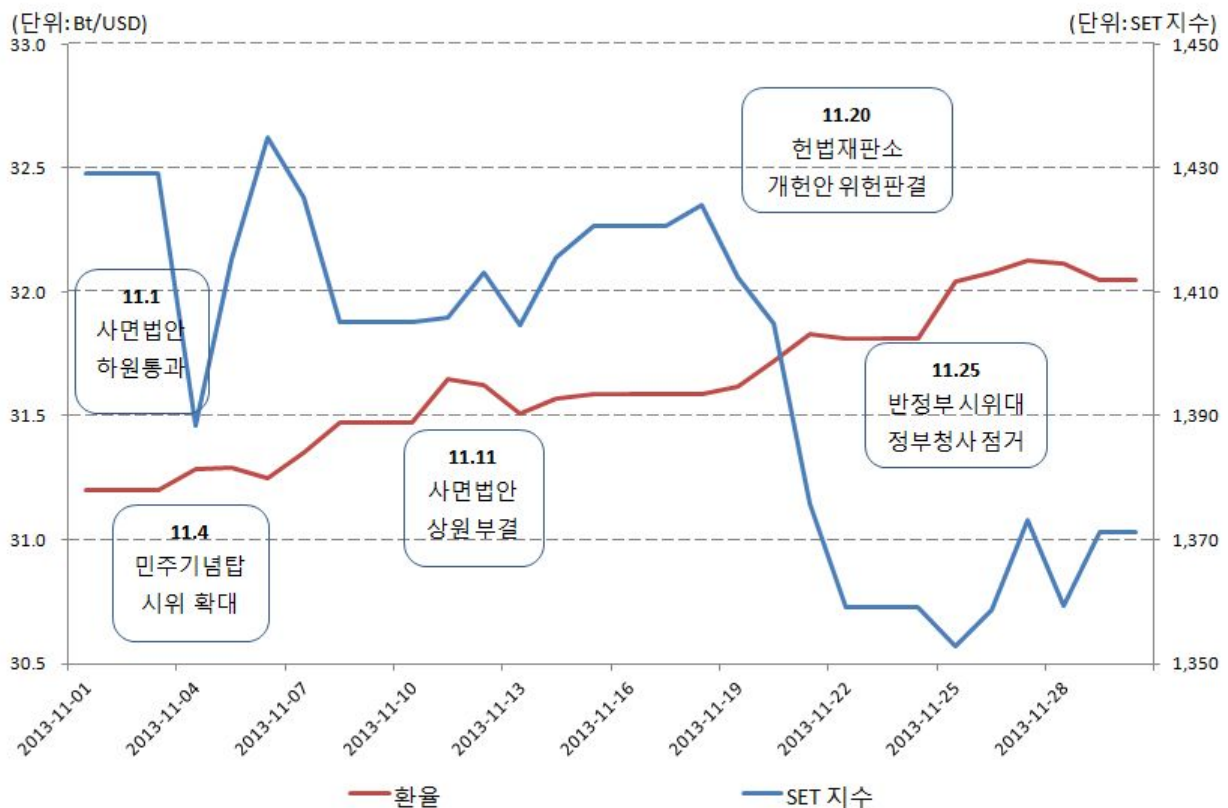
주: 2013년 1/4~3/4분기 수출입 자료는 바트화 기준 자료를 분기별 평균 환율로 나누어 계산함.

자료: 태국중앙은행(www.bot.or.th).

1) Warangkana(2013), "Thailand cuts growth forecast," *The Wall Street Journal*, (October 25).

- 2013년 11월부터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되면서 환율 상승, 증시 폭락 등 금융 부문에서도 최근 정정 불안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음.
- 태국 바트화는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1월 초부터 절하되는 추세이며, 12월 4일 기준 32.22 Bt/USD로 40개월 만에 최고치에 근접함.
- 증시 부문도 11월 초 등락을 반복하다 20일 헌법재판소의 개헌안 위헌판결 이후로 SET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 11월 초 대비 약 4%, 연중 고점대비 약 17%까지 하락한 후 소폭 반등함.

그림 1. 최근 태국의 환율 및 증시 추이



자료: Bloomberg.

나. 내수경기 부진

- 내수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경기지표들도 2013년 중반부터 대체로 하락세를 기록하는 추세임.
- 경기동행지수는 수입, 제조업 생산지수, 부가세 세입, 자동차 판매량 등을 지수화해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2013년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시작되었으며 2013년 9월 기준 전년대비 2.7% 하락함.

- 민간투자지수는 건설 허가, 전자재 판매량, 자본재 수입, 설비 판매, 상용차 판매량 등을 지수화해 민간부문의 투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2013년 중반까지 하락세를 지속한 후 정체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기준 전년대비 -3.3% 수준임.
- 민간소비지수는 자동차 판매, 연료 판매, 전력 사용량, 소비재 수입, 부가세 세입 등을 지수화해 내수 소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2013년 연내 소폭 등락했으나 2013년 9월에 전년대비 -6.1% 수준으로 대폭 하락함.
- 이와 같은 내수경기 지수들은 대다수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의 정정 불안 상황이 악화될 경우 향후 내수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2. 태국의 주요 경기지수 추이(2013년 1월~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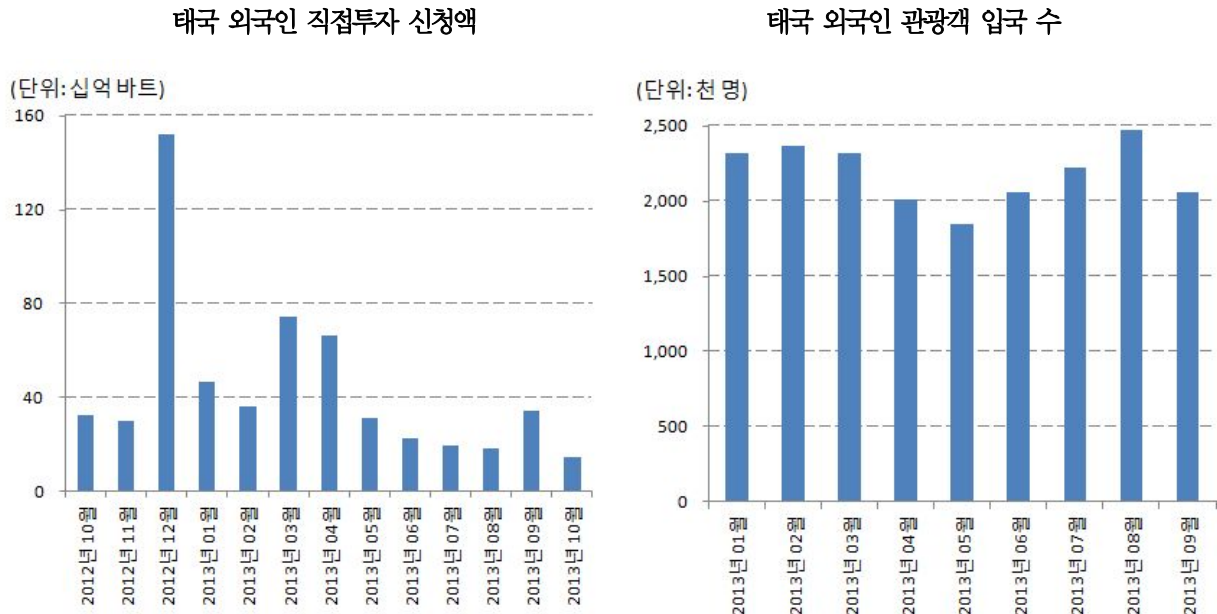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경기동행지수(CEI)	132.49	131.57	132.16	131.22	130.64	130.95	129.71	130.05	129.01
증가율(YoY)	5.2	2.8	2.1	1.5	-0.8	0.6	-1.3	-0.2	-2.7
민간투자지수(PII)	254.51	247.45	246.40	242.38	240.44	239.23	239.93	241.16	241.09
증가율(YoY)	22.4	9.3	4.0	-0.7	-3.3	-4.2	-4.8	-3.4	-3.3
민간소비지수(PCI)	149.78	148.82	147.58	147.19	147.51	147.31	146.62	148.09	146.20
증가율(YoY)	6.6	3.2	1.7	1.8	0.0	0.4	-0.7	0.7	-6.1

자료: 태국중앙은행(www.bot.or.th).

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및 관광산업 위축 우려

-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신청액 및 관광객 입국 수 또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정정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감소 및 관광산업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임.
- 태국 시장으로의 FDI 신청액이 2013년 중반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며, 최근 반정부 시위로 인해 태국투자청(Board of Investment)이 임시 휴업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FDI 투자유치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함.
- 태국 관광산업은 2011년 대홍수 발생으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 수가 감소해 일시적으로 위축된 바 있으나, 이후 2012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 수가 사상 최대인 2,200만 명을 기록함.
- 2013년 9월에 누적 외국인 관광객 입국 수가 이미 2,000만 명 수준을 넘어섰으며, 연간 외국인 관광객 2,50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최근 반정부 시위로 인한 안전상의 우려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태국 방콕을 비롯한 인근지역을 여행 자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로 인해 관광업계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그림 2. 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외국인 관광객 입국 수 추이



자료: 태국투자청(www.boei.go.th), 태국중앙은행(www.bot.or.th) 자료 참고.

3. 향후 정국 전망

- 태국의 정치적인 배경과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태국 정국 방향은 1)신속한 정권 퇴진과 조기 총선 실시, 2)장기 대치로 정국불안 심화, 3) 제3 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정리 중 하나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신속한 정권 퇴진과 조기 총선 실시는 가장 합법적인 해결 방법이나, 양측 모두 총선을 통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한계임.
 - 태국은 정정 불안 해소를 위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활용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으며, 이미 현 정부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황임.
 - 한편 조기 총선을 실시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서민·농민층의 지지도가 높은 친탁신계 정당인 프어타이당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임.
- 태국 정부와 반정부 시위대는 사태 해결을 위한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어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수텟 전 부총리는 ‘국민의회’라는 형태의 새로운 정치 형태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잉락 총리는 현 정부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정부이며 ‘국민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텟 전 부총리의 제안을 거절함.
- 태국 정부는 시위가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 또한 시위 종단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해 반정부 시위대 측과의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며 수텟 전 부총리도 정부 측의 협상 요청을 거절함.²⁾
-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태국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권력을 사용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2010년 UDD 시위대 진압으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해 여론이 크게 악화된 사례가 있어 공권력 투입을 꺼리는 상황임.

■ 일각에서는 태국 정부나 반정부 시위대의 합의가 아닌 군부 개입, 왕실의 중재 등 제3 세력의 개입으로 대치 정국이 해소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으나, 실제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태국 군부는 정치적인 중립을 선언했으나 태국은 1932년 입헌 이후 19번이나 쿠데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태국 국왕 탄신일인 12월 5일을 전후로 시위가 일시적으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왕실에서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된 바 있음.
- 정치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 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정리는 일시적으로 시위 상황만 정리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군부, 왕실 모두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밝힌 바도 없음.

■ 태국에 진출했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태국의 정세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현재 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우 반정부 시위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현지 생산관리, 거래처 상황, 노무관리, 외환 리스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태국 정부부처와의 협의, 승인 등 정부와의 업무 관계가 중요한 업종의 경우 주요 정부부처 점거 시위로 행정 부재상황인 점을 감안해 태국 정부 측 업무 마비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태국으로의 투자 진출 혹은 태국 업체와 신규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전 기획 단계에서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KIEP

2) "Suthep spurns talks offer." (November 29, 2013), *Bangkok Post*.